

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 강화

‘혁신도시 상생발전 실무협의회’ 개최... 지역발전계획 추진상황 점검· 주요 현안 발생 시 사전 협의 건의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도는 4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전주시, 완주군 및 9개 이전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혁신도시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발전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양성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유관기관 협력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등 6개 분야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전 기관들의 지역물품 우선구매 실적에 공유하고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함께, 전북도는 향후 이전 공공기관에서 조직 개편으로 타 지역 이전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전주시, 완주군 및 9개 이전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혁신도시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발전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수립하는 ‘2026년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침’을 내년도 계획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주요 행사 홍보도 이어졌다. 전주시는 ‘전주페스티벌’

타 2025’와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을 소개했으며, 완주군은 ‘제12회 와일드&로컬푸드축제’를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참여를 제안했다. 설성희 도 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전북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수도권 도시민 겨냥...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개최

4-6일 서울 방배동 귀농귀촌사무소서 수도권 도시민 대상 1:1 상담... 귀농귀촌 길라잡이 역할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전북 귀농귀촌 사무소에서 2,600만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2015년에 시작된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은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며, 그간 전북자치도 수도권 귀농귀촌인 유치에 앞장서왔다.

이번 상담홍보전에서는 ‘내가 그린 대로, 고향의 품’이라는 부제 아래 전북자치도와 13개 시군,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교육원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귀농·귀촌 상담 및 정책 설명회, 토크 콘서트, 우수 귀농귀촌 정착사례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상담관에서는 △13개 시군별 상담 및 전문상담(귀농, 귀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전북 귀농귀촌 사무소에서 2,600만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을 개최한다.

산, 농촌일자리)을 운영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지원정책 및 작물선정, 임업과 귀산촌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1:1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행사관에서는 매일 △테마별 오전 특강을 통해 귀농귀촌에 관심

이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마인드 함양, 귀산촌의 이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북의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산촌 정책설명회, △‘나의 세컨드 하우스, 채류형 캠프로 4도 3촌 생활하기’ 등 성공한 귀농귀촌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정보와 생생한 경험담을 전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상담홍보전을 통해 수도권 도시민들이 전북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알고,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고창 장호어촌계,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사업비 10억원 확보

저온저장시설·종패생산장 구축 등...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수익 창출·활성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군 장호어촌계가 해양수산부의 ‘2025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에서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10억원의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중 전국 6개소가 선정된 가운데, 2개 소만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북에서는 고창 장호어촌계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확보한 사업비는 국비 5억 원, 도비 1.2억 원, 군비 2.8억

원, 자부담 1억 원으로 구성된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체 규약을 제정·운영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제도로,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과 어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다.

확보된 사업비는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건립, △지역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종패생산장 구축,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기계차 구입 등에 투입될 예정이

다. 도는 이를 통해 장호어촌계의 생산성과 공동체 수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특별사업비 확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자율관리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지역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자치도, 인공조명 빛공해 영향평가 착수

도내 14개 시군 250곳 조명 조사... 수면·생태계 영향 분석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야간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조명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다.

도는 9월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계획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대표 지점 250곳을 선정해 가로등·보안등·공원등 같은 공간조명, 전광판·간판 등 광고조명, 건축물·교량의 장식조명 등을 정밀 측정·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빛공해가 수면 장애, 시력 저하, 생체리듬 교란 같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농업·수산업의 생산성 저해, 곤충 번식·서식지 교란, 천체 관측 방해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전북자치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빛공해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조명 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일정 구역의 빛 밝기 기준을 설정해 과도한 조명을 규제하는 것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보고회에서는 해외 선진사례도 소개됐다. 국제조명위원회(CIE)는 옥외조

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제방해가능호환성은 어두운 하늘을 지켜낸 지역에 인증을 부여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조명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생태계 보전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선 전북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빛공해는 눈의 피로와 수면 방해 같은 생활 불편을 넘어 생태계 교란과 에너지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도민 생활을 지키는 빛공해 방지정책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안전점검의 날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완주 봉동초등학교 일원에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맞아 개학기 통학로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완주군, 완주경찰서, 안전모니터봉사단,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봉사단체와 봉동초등학교 안전히어로즈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해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날 도는 등교 시간대 ‘아이먼저 안전먼저’, ‘황단보도 일단멈춤’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아이 먼저’ 캠페인을 진행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쿨버스를 주·정차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통학로 불법 적치물 등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했다.

도는 연말까지 시기별 안전테마를 정하여 시군, 유관기관, 민간안전단체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시내버스 랩핑 홍보 등을 실시하여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5주 동안 시군,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도내 423개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주변 보호구역에 대상으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발견 시에는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해당 포털(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유공자 서훈 재논의 급물살

관련 단체 대표단, 보훈부 장관과 간담회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했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들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가 오랜 공론화 끝에 새 정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2일,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대표단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직접 만나 서훈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하며 해묵은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졌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대한 독립 유공 서훈 문제는 1994년 100주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동학농민군이 전주회약 이후 1894년 가을 재봉기한 것은 일본의 경복궁 침략에 맹목히 항거한 것으로, 이는 당시 심문 기록과 현재 교과서, 심지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역사적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들에게는 서훈이 수여된 반면, 1894년 동학농민군에게는 명확한 이유 없이 서훈이 보류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준병·박수현 국회의원과 역사학자들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예비법’에도 2차 봉기가 ‘항일 무장투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훈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동학 단체 대표들은 서훈이 “오랜 세월 역적으로 몰린 선조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서훈 대상자도 약 480명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예산상의 부담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개최

경진대회 시상·우수사례 발표·농산물 판매 노하우 공유 등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분야 농업인 역량을 제고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4일 정보화농업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 및 농산물 판매 노하우를 공유하는 혁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린 부문별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15명의 농업인 시상 및 정보화 유공 도지사 표창도 김지희 농촌지도사(고창군농업기술센터), 김동욱 대표(남원)에게 전수했다.

또한, 정보화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인 황종운 대표(파용농장)로부터 토마토 온실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수량 증대 및 품질 개선과 온라인 직거래 판매 성과 등을 공유하고, 라이브 커머스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최이연 대표(피칸&수피다농장)의 주 작목인 ‘피칸’을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과정을 시연해 현장의 열기를 한층 끌어 올렸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농업인정보화연구회 소속 20여명 대표의 우수한 농



식품을 전시하고 농산물 마케팅 현장 응대 요령도 공유하며 참석한 농업인의 호응이 높았다.

이번 도 대회에서 라이브 커머스, UCC(쇼츠), 정보화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농업인이 10월 23일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혁신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품하게 된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권택 자 원경영과장은 “이번 행사가 정보화 농업인의 화합의 장이자,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우리도 농산물의 특성을 홍보하고 판매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시군 평가 실시

‘최우수’-전주·무주, ‘우수’-군산·익산·장수·순창·부안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시군 평가’에서 전주시와 무주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군산시·익산시·장수군·순창군·부안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1,4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는 민간전문가 3,835명, 유관기관 관계자 455명, 공무원 2,322명 등 총 6,60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추진됐다. 평가는 △일일시행(실행 계획 수립, 우수사례), △점검대상 선정(적설성, 준수성), △점검방법(민관 합동점검 추진도, 전문장비 활용도),

△점검결과 이력관리 및 후속조치(사후관리 노력도, 이력·후속조치 노력도), △안전문화 확산(홍보 노력도, 주민점검신청제 추진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전주시는 민간시설물 점검 비율을 68%까지 높여 민간 분야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배수로 정화활동 등을 실시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무주군은 수상제저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켜 점검 전문성을 높였으며, 전문장비 활용도를 82%까지 끌어올려 내실 있는 점검을 추진했다. /이만호 기자

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실태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대기질 개선과 도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비산먼지 대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 동안 주거지 인근 건설공사장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업장 등 총 70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 6명이 투입되며,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집중 대상이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방진막·세류시설·살

수시설 등 억제시설 설치와 운영 상태, 살수작업 실시 여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특히 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와 벌금 부과는 물론 사용중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중대한 사안은 피의자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 사례를 시군에 공유하고 언론에도 알림으로써 제발 방지를 유도한다. /이만호 기자